재 정 학

1.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세의 과세 대상은 법인 이윤과 배당 소득이다.

② 부가가치세의 면세제도는 형평성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③ 직접세의 예로 소득세를 들 수 있고, 간접세의 예로 부가가치세를 들 수 있다.

④ 소득세는 노동과 여가의 선택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⑤ 부가가치세는 직접세에 비해 조세 저항이 낮아 세수확보에 유리하다.

2. 부동산 관련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거래 시 부과된다.

② 부동산 보유세 인상 시 미래의 보유세 부담이 집값에 반영되어 집값이 상승하는 현상을 조세의 자본화라고 한다.

③ 보유세 인상의 실제적인 부담은 보유세 인상 이후 부동산 구입자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

④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⑤ 부동산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초과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3. 램지원칙과 역탄력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램지원칙은 효율성을 고려한 과세 원칙이다.

② 역탄력성원칙이 램지원칙에 비해 일반적인 원칙이다.

③ 역탄력성원칙에 따르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게 과세하여야 한다.

④ 역탄력성원칙에 따르면 필수재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로 과세하여야 한다.

⑤ 램지원칙에 따르면 모든 상품의 보상수요량에 똑같은 비율의 감소가 일어나도록 세율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4. 개인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헤이그-사이먼스(Haig-Simons) 소득은 두 시점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능력 순증가의 화폐가치이다.

② 우리나라는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개인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③ 감면 총규모를 유지하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하는 경우 수직적 형평성은 개선된다.

④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실현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⑤ 누진적인 소득세 하에서 인플레이션은 실질 조세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가진다.

5. 비용불변의 독점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종가세를 부과할 때 나타나는 효과로 옳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선형이며 우하향한다.)

① 비용불변이기 때문에 소비자가격은 변동하지 않는다.

② 종가세의 부담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분담한다.

③ 소비자잉여는 불변이다.

④ 독점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줄이지 않고 대응할 수 있어 독점이윤은 불변이다.

⑤ 가격상승은 부과된 단위당 세액보다 크다.

6. 조세의 근거학설인 이익설의 장점은?

① 조세가 갖는 강제성의 특징을 반영한다.

②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조세부과가 용이하다.

③ 경제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지출 재원 조달이 수월하다.

④ 외부성과 무관하게 공공재 공급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⑤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복지재원 확보가 유리하다.

7. 피구세(Pigouvian tax) 형태의 공해세 부과가 초래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해세 부과는 해당 제품의 한계비용을 인하하는 영향을 초래한다.

② 공해세 부과 후 해당 제품의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③ 공해세 부과는 해당 제품의 과소한 생산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④ 공해세 부과에 따라 공해가 완전히 제거된다.

⑤ 공해세의 대표적인 예로 탄소세를 들 수 있다.

8. 다음 중 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탈세에 대한 벌금률을 높이면 탈세는 감소한다.

② 세무감사의 확률을 높이면 탈세는 감소한다.

③ 임금소득에 비해 자영업 소득의 탈세율이 높은 경우가 많다.

④ 귀속소득을 보고하지 않아 탈세가 되는 경우가 많다.

⑤ 세율 인상의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을 증가시킨다.

9. 다음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내용의 일부이다. 현대의 조세이론 가운데 자원배분의 왜곡과 관련된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조세 징수에 많은 수의 관리들이 필요해서 그들의 봉급이 조세수입의 대부분을 갉아먹고 또한 그들의 부수입이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과세부담으로 되는 경우이다.
> ㄴ. 조세가 국민들의 근면을 방해하고, 그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고용할 수 있는) 어떤 산업부문에 종사하는 것을 단념하도록 만드는 경우이다.
> ㄷ. 탈세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불행한 사람들에게 몰수 기타의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조세가 그들을 종종 몰락시키고 그리하여 사회가 (그들의 자본 운용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이다.
> ㄹ. 국민들에게 조세 징수인의 빈번한 방문·짜증나는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조세가 국민들에게 수많은 불필요한 고통·번거로움·억압을 주는 경우이다.

① ㄴ ② ㄹ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10. 세제개편 내용으로 자동안정화장치(built-in stabilizer)가 아닌 것은?

① 담배 소비세를 인상하였다.

②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확대하였다.

③ 저소득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을 확대하였다.

④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하여 세율을 인상하였다.

⑤ 소득세 최저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축소하였다.

11. A재의 한계비용은 100 이고, 보상수요곡선은 $P = 200 - 2Q_a$ 이다. A재의 공급자에게 단위당 20의 조세를 부과하였을 때 비효율성 계수(coefficient of inefficiency)는? (단, Q_a: A재의 수량)

① 0.115 ② 0.125 ③ 0.135 ④ 0.145 ⑤ 0.250

12.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합방식(partnership method): 완전통합으로 배당이나 사내유보를 구분하지 않고 개인소득세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ㄴ. 자본이득방식(capital gains method): 완전통합으로 법인소득 중 배당되는 부분은 개인소득으로, 사내유보는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ㄷ. 배당세액공제제도(dividend gross-up method): 부분통합으로 법인의 모든 이윤에 과세한 후,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분 전체를 개인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방식이다.
ㄹ. 차등세율제도(split rate system): 부분통합으로 법인의 이윤 중 배당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내유보가 되는 부분보다 더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해 주는 방식이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3.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①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므로 총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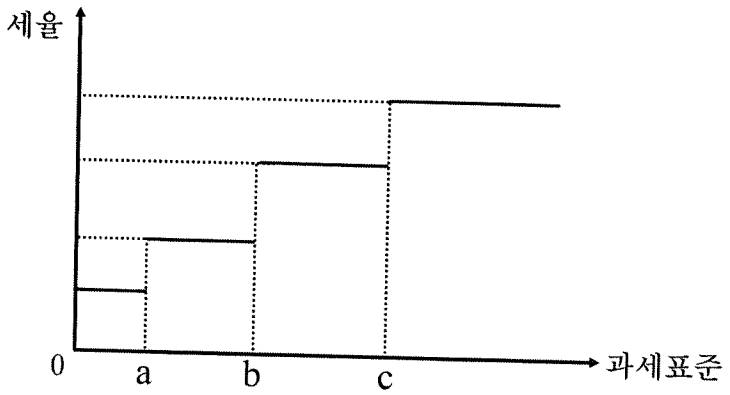
②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소득효과로 노동공급이 증가하고, 대체효과로 노동공급이 감소하여 총노동공급의 변화는 알 수 없다.

③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므로 총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④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소득효과로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대체효과로 노동공급이 증가하여 총노동공급의 변화는 알 수 없다.

⑤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소득효과로 노동공급이 증가하고, 대체효과로 노동공급이 감소하여 총노동공급의 변화는 알 수 없다.

14. 다음 그림은 과세표준과 세율의 관계를 표시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세표준이 a를 초과할 때 비로소 누진세가 나타난다.
② 평균세율은 과세표준의 구간에 따라 계단식으로 증가한다.
③ 과세표준의 전 구간에 걸쳐 평균세율은 한계세율보다 낮다.
④ 과세표준이 c를 초과하면 평균세율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⑤ 과세표준의 전 구간에서 세액공제가 증가하면 한계세율은 감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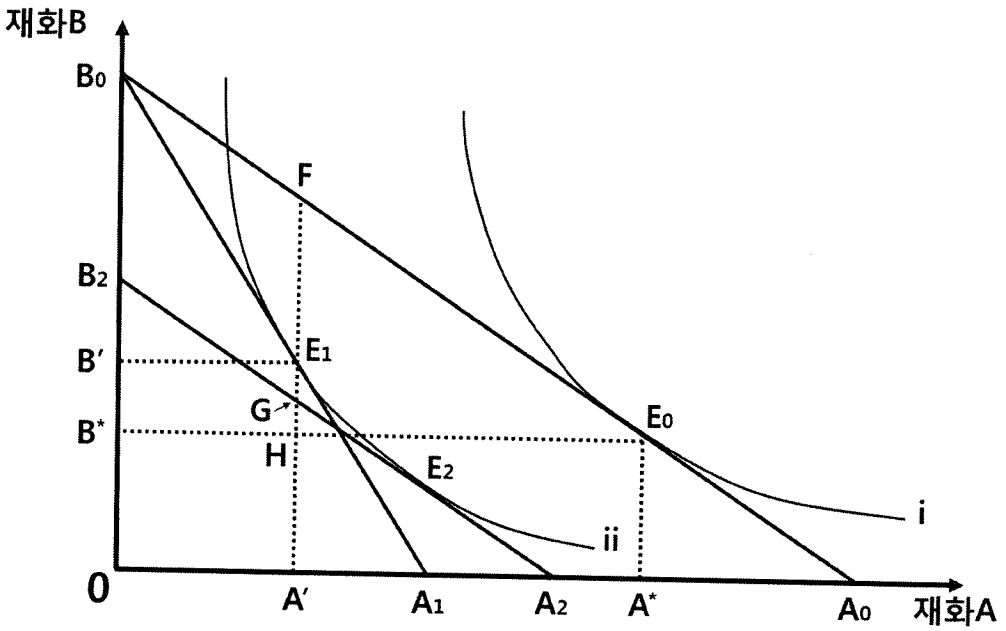
15. 이자소득세 부과의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다.)

① 이자소득세 부과 시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의 합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②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면 미래소비의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진다.
③ 이자소득세 부과 시 민간저축은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다.
④ 이자소득세 부과 시 현재소비는 대체효과에 의해 증가하고 소득효과에 의해 감소한다.
⑤ 이자소득세 부과 시 미래소비에 주는 영향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나눠지는데 이들 두 효과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한다.

16. X재, Y재, 여가 간의 선택에 조세부과가 미치는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X재: 여가와 보완재, Y재: 노동과 보완재)

① X재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X재와 여가 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② Y재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Y재와 여가 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③ 일반소비세, 소득세, 개별소비세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가는 단정하기 어렵다.
④ X재에 중과하는 개별 소비세는 여가에 간접적으로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다.
⑤ 정액세(lump-sum tax)는 초과부담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우월한 조세이다.

17. 다음 그림은 재화 A, 재화 B가 존재하는 경제에서 납세자의 예산선과 무차별곡선(i, ii)을 나타내고 있다. 과세 이전의 예산선은 $\overline{B_0A_0}$이고, 과세 이후의 예산선은 $\overline{B_0A_1}$이다. 과세 이전과 과세 이후 납세자의 효용극대화 점은 각각 E_0, E_1이다. 과세 이전 예산선과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면서 과세 이후 효용극대화 점을 지나는 무차별곡선에 접하는 예산선은 $\overline{B_2A_2}$로 주어져 있다. 이 때 초과부담은?



① $\overline{FE_1}$ ② $\overline{FG}$ ③ $\overline{FH}$ ④ $\overline{E_1G}$ ⑤ $\overline{E_1H}$

18. 개인소득세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누진세율 구조인 경우 세액공제의 실제 조세 감면 효과는 대상자의 소득이 클수록 크게 나타난다.

② 소득공제는 담세능력에 따라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다.

③ 소득공제를 실시하면 파레토 효율성 조건 중의 하나인 교환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④ 개인들의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각각 다른 상황에서 특정 경제행위의 장려가 조세감면의 목표라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⑤ 현재 우리나라 세액공제 사례로 의료비, 정치후원금 등이 있다.

19. 하버거(A. Harberger)는 조세귀착에 관한 일반균형 모형에서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ㄱ. 두 재화 X, Y가 있으며, 생산기술은 일차동차(선형동차)이고 X는 자본집약적 부문이고 Y는 노동집약적 부문이다.**
> **ㄴ. 모든 시장은 완전경쟁이고 노동과 자본의 총량은 일정하고 부문 간 요소 이동성이 완전하다.**

① X부문과 Y부문의 노동에 대한 동률의 조세는 그 부담이 모두 노동에 귀착된다.

② X재화에 물품세를 부과하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높이게 된다.

③ X부문의 자본에 대한 과세는 산출효과를 통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낮추게 된다.

④ X부문의 자본에 대한 과세는 요소대체효과를 통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낮추게 된다.

⑤ Y부문의 노동에 대한 과세 시 산출효과와 요소대체효과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20.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재가치법에서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편익이 초기에 집중되는 사업의 상대적 우선순위가 높아진다.

② 내부수익률은 사업 순편익의 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③ 사업의 규모가 현저히 다른 두 사업에 대해서 내부수익률법과 현재가치법은 다른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다.

④ 추가적인 비용을 비용 증가 또는 편익 감소 어느 쪽으로 분류하든 편익-비용 비율은 달라지지 않는다.

⑤ 우리나라 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비용-편익 분석의 사례이다.

21.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적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형태의 법인세는 기업의 생산 결정을 왜곡하지 않는다.

② 법인세 부과로 인해 법인소득 단계와 개인소득 단계에서 이중 과세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③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여러 세율로 구성된 누진구조로 되어 있다.

④ 타인자본에 대해서만 이자비용 공제를 허용하는 법인세는 투자재원 조달 방식에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다.

⑤ 국가 간의 조세경쟁이 존재하는 경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 국은 법인세율을 낮춘다.

22. 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후소득의 감소에 대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② 사회보험으로 운용하는 이유는 역선택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③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적립방식이 아닌 부과방식으로 도입되었다.

④ 연금제도가 가지는 재산대체효과는 민간저축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⑤ 부과방식의 연금이 운용되게 되면 세대간 소득이전이 발생할 수 있다.

23. 보상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파레토 기준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의 접근이다.

② 개인 간의 직접적 효용비교 없이 어떤 변화가 개선인지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

③ 판단하는 시점에서는 보상 여부를 감안하지 않지만 선택 결정 이후에는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성립한다.

④ 하나의 상태가 다른 상태로 변화했을 때 이득을 보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는 사람의 손실을 보전하고도 남는 것이 있을 때 칼도기준을 충족한다.

⑤ 사회구성원들이 1원에 대해 똑같은 사회적 가치평가를 한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24. 야생동물 보호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순찰대를 만들어 감시를 하였으나 여전히 남획이 계속되었다면 규제를 통한 외부성의 내부화에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② 야생동물에 대한 재산권을 동물 판매업자에게 부여한 결과 남획이 줄어들었다. 이는 재산권을 누구에게 부여하는가에 따라 소득분배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③ 포획 가능한 야생동물 수를 매년 정하고, 포획권을 경매를 통해 판매하여 야생동물 수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시장기구를 통해 외부성을 내부화한 예이다.

④ 야생동물에 대한 재산권을 해당 지역의 부족들에게 부여하였더니, 이 부족들은 탐방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거두기 위하여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강화했다. 이는 재산권 확립을 통한 외부성 문제 해결의 예이다.

⑤ 야생동물을 포획·반출하는 행위에 세금을 부과하여 야생동물의 남획을 최적 수준으로 줄일 수 있었다면 이러한 정책은 피구 조세의 예로 볼 수 있다.

25. 애로우(K. Arrow)의 불가능성정리에서 사회적 선호체계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속성이 아닌 것은?

① 볼록성
② 이행성
③ 비독재성
④ 파레토 원칙
⑤ 제3의 선택가능성으로부터의 독립

26. 갑의 생산행위가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을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 갑의 한계편익은 $200-\frac{1}{2}Q$, 한계비용은 50, 갑의 행위로 인한 을의 한계피해비용은 10 이다. 코즈(Coase) 정리에 따라 효율적인 생산규모 산정이 가능하다고 할 때,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Q: 갑의 생산량)

① 갑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을이 80을 갑에게 제공하면 자발적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

② 갑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발적 협상이 타결되면 갑의 생산량은 증가한다.

③ 갑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발적 협상이 타결되면 갑의 최대 후생은 22,600이다.

④ 을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갑이 을에게 2,500을 제공하면 자발적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

⑤ 을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발적 협상이 타결이 되지 않으면 갑의 생산량은 300이다.

27. 현물보조와 현금보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물보조의 대표적인 항목에는 의무 교육, 의료, 주거 등 가치재들이 포함된다.

② 현물보조에 비하여 현금보조는 높은 행정비용과 운영비용을 수반한다.

③ 동일한 재정을 투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현금보조가 현물보조에 비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넓은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④ 현물보조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해당 현물의 소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⑤ 현금보조가 가지는 단점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부정수급과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28. 갑과 을 두 사람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이들의 후생이 소득수준과 동일할 경우, 갑의 소득은 400, 을의 소득은 100 이다. 앳킨슨 지수(Atkinson index)로 소득분배를 평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롤즈의 사회후생함수인 경우 앳킨슨 지수는 0이다.

② 롤즈의 사회후생함수인 경우 앳킨슨 지수는 0.4이다.

③ 롤즈의 사회후생함수인 경우 앳킨슨 지수는 1이다.

④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인 경우 앳킨슨 지수는 1이다.

⑤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인 경우 앳킨슨 지수는 0이다.

29. 규모수익체증 하에서 적정 공공요금 결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계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급되는 공공서비스 양은 효율적이다.

② 한계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기관은 이윤을 창출할 수 없다.

③ 평균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급되는 공공서비스 양은 비효율적이다.

④ 평균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기관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⑤ 이부가격제도(two-part tariff)는 기업의 손실 규모를 줄이기 위하여 도입된다.

30. 갑과 을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경제에서 공공재 생산의 단위비용은 생산수준과 관계없이 1 이다. 갑의 공공재 수요함수는 $3-\frac{1}{3}G_a$ 이고, 을의 공공재 수요함수는 $4-\frac{1}{2}G_b$ 이다. 린달균형(Lindahl equilibrium)에 의해 적정공공재를 생산할 때, 갑과 을의 비용분담 비율은? (단, G_a , G_b 는 각각 갑과 을의 공공재 수요량이다.)

① 갑: 0.2 을: 0.8 ② 갑: 0.4 을: 0.6 ③ 갑: 0.5 을: 0.5

④ 갑: 0.6 을: 0.4 ⑤ 갑: 0.8 을: 0.2

31. A와 B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비경합적이고 배제불가능한 연극공연에 대한 A의 효용함수는 $U_A=100+20D-D^2$ 이고 B의 효용함수는 $U_B=20+12D-2D^2$ 으로 주어져 있다. 연극공연의 한계비용이 $MC=2D$ 라고 할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 연극공연은 몇 회인가? (단, D는 연극공연 횟수이다.)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32. 투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과반수제에서는 '투표의 역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 ㄴ. 보다방식(Borda count)에서는 선택대상 간 연관성이 없다.
> ㄷ. 선택대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는 점수투표제에서 직접 표시될 수 있다.
> ㄹ. 전략적 행동이 없다면 점수투표제가 선택대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가장 잘 반영한다.
> ㅁ. 점수투표제는 개인의 선호를 서수로 나타낸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33. 공공투자가 유발하는 편익과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질적 편익은 공공사업의 최종소비자가 얻는 편익으로, 사회후생 증가에 기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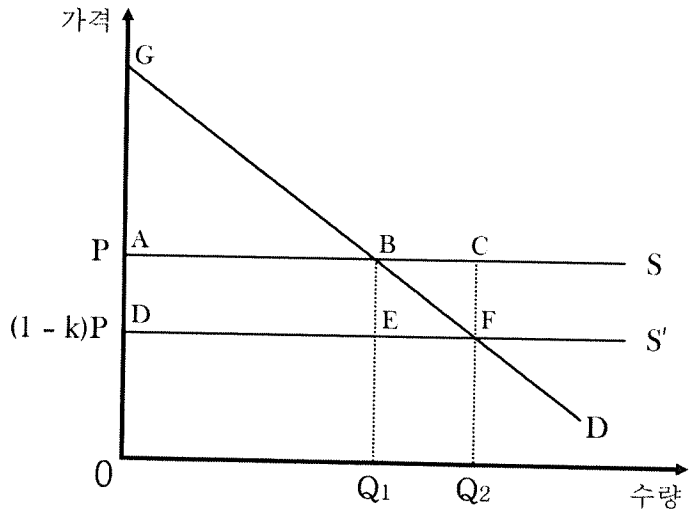
② 화폐적 편익과 비용은 공공사업에 의해 야기되는 상대가격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며, 사회전체의 후생은 불변이다.

③ 무형적 비용은 외부불경제에 의해 발생한다.

④ 유형적 편익이 무형적 편익보다 작은 공공사업이 존재한다.

⑤ 무형적 편익과 비용은 시장에서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투자의 시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34. 다음 그림은 어떤 재화에 대한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수평인 공급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이 재화에 정부가 상품 한 단위당 k 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보조금 이후의 공급곡선은 S′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이 가지는 초과부담은 무엇으로 표시되는가?



① 초과부담은 0이다. ② 삼각형 BCF ③ 삼각형 BEF

④ 삼각형 GBA ⑤ 사각형 ABFD

35. 공동의 목초지에 갑과 을이 각각 100마리의 양을 방목하기로 합의하면 갑과 을의 이득은 각각 10원이다. 두 사람 모두 합의를 어겨 100마리 이상을 방목하면 갑과 을의 이득은 각각 0원이다. 만약 한 명은 합의를 지키고 다른 한 명이 합의를 어기면 어긴 사람의 이득은 11원, 합의를 지킨 사람의 이득은 -1원이다. 이러한 게임적 상황에서 정부가 합의를 어긴 사람에게 2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때 발생될 결과는?

① 두 사람 모두 합의를 지킨다.

② 두 사람 모두 합의를 어긴다.

③ 두 사람의 합의 준수 여부는 불확실하다.

④ 갑은 반드시 합의를 지키지만 을은 합의를 어긴다.

⑤ 갑은 반드시 합의를 어기지만 을은 합의를 지킨다.

36. 지방 분권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권화로 지역들이 차별성을 가지고, 여러 지역 중에서 투표자가 자신이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후생이 증가될 수 있다.

② 분권화로 지방정부는 각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할 수 있다.

③ 한 지역의 공공재가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주는 외부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분권화는 효율적인 공공재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④ 조세행정에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세 행정을 이용하여 징수하고 이후 지방으로 배분하는 형태로 조세행정과 재정배분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37. 정부 지출증대를 위한 공채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채를 전액 중앙은행이 인수할 경우, 경기가 과열된 상태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② 공채를 전액 중앙은행이 인수할 경우, 화폐공급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유효수요 증대효과는 없다.

③ 공채가 전액 시중에서 소화될 경우, 이자율이 상승하고, 민간투자가 억제되는 현상을 구축효과라고 한다.

④ 공채의 잔액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의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현상을 러너효과라고 한다.

⑤ 공채가 전액 시중에서 소화될 경우, 중앙은행이 인수할 경우보다 유효수요의 증대효과가 크다.

38. 중위투표자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위투표자는 전체 투표자 선호의 한 가운데 있는 투표자를 의미한다.

② 정당들이 차별적인 정책을 내세우도록 만드는 현상과 관련된다.

③ 모든 투표자의 선호가 단일정점(단봉형)인 경우 성립한다.

④ 중위투표자정리에 의한 정치적 균형이 항상 파레토 효율을 달성한다는 보장은 없다.

⑤ 정당들이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정책들을 내세우도록 만드는 것과 관련된다.

3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② 성과주의예산제도는 관리기능을 강조한 제도이다.

③ 프로그램예산제도는 계획기능을 강조한 제도이다.

④ 영기준예산제도는 점증주의적 예산을 탈피하여 효율적 자원배분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⑤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예산의 과목을 부서별로 나누어 편성하는 제도이다.

40. 세수의 소득탄력성이 $\frac{\Delta T}{\Delta Y} \cdot \frac{Y}{T} = 1.2$ 이고, 조세부담률은 $\frac{T}{Y} = 0.25$ 라고 가정한다. 여기서 $\Delta G = \Delta T$라고 할 때, 정부지출승수 값은? (단, T: 조세수입, Y: 국민소득, G: 정부지출)

① $\frac{3}{10}$ ② 1 ③ $\frac{5}{2}$ ④ $\frac{10}{3}$ ⑤ $\frac{24}{5}$

세법학개론

41.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상 국세의 우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상호간의 우선관계는 압류에 관한 국세, 교부청구한 국세, 납세담보 있는 국세 순이다.

② 세무서장은 대물변제의 예약에 의하여 권리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가등기된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여 납세고지한 경우 법정기일은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④ 가산금의 경우 법정기일은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이다.

⑤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공과금의 체납처분비는 국세에 우선한다.

42.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②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에는 그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된다.

③ 조세심판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④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⑤ 국세의 심판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43.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②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③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④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⑤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44. <국세징수법> 甲과 乙과 丙이 공유하고 있는 재산 중 甲의 지분을 「국세징수법」 상 甲의 체납으로 공매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은 '공유자(체납자 제외)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 현재의 공유자인 乙과 丙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乙 또는 丙은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은 乙과 丙이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그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한다.

⑤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이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한 乙 또는 丙에게 매각결정되었지만 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공매하여야 한다.

45.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상 가산세 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③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④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⑤ 세법에 따른 제출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제출 의무 위반 관련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46.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상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ㄴ.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ㄷ. 압류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ㄹ.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ㅁ.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① ㄱ, ㄹ　②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ㅁ

47. <국세징수법>「국세징수법」상 징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은 세법에서 국세의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지방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에는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에,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수결정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⑤ 「국세기본법」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가 있는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해당 재산의 양도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변제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그 재산은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48. <국세징수법>「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은 압류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일 때에는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②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이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매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이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압류한 예술품의 매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매각기관은 그 압류한 예술품의 매각을 대행하거나 직접 매수할 수 있다.

⑤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하는 경우 그 가운데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체납액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체납자는 그 재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49. <조세범처벌법>「조세범처벌법」상 조세범처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범처벌법」상 조세란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말한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는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③ 법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④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50. <조세범처벌법>「조세범처벌법」상 주류 또는 유류에 대한 조세범처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으로서 제조자나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을 몰취할 수 있다.

③ 「주세법」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재사용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면세유의 부정 유통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1. <소득세법>「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① 거주자 甲은 이혼하면서 법원의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하여 배우자에게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② 사업자인 거주자 乙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처분하였다.

③ 거주자 丙은 본인 소유의 토지를 동생에게 증여하면서, 동생이 그 토지에 의하여 담보된 丙의 은행대출 채무를 인수하였다.

④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거주자 丁은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였다.

⑤ 거주자 戊는 자기소유의 토지를 경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였다.

52. <소득세법>「소득세법」상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 해지로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때에는,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중도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뺄 수 있다.

②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 합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와 거래한 그 금액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③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④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⑤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53. <소득세법>「소득세법」상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② 비거주자 甲이 국내에 두 곳의 사업장을 둔 경우,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③ 해외근무 등으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 乙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④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지변경신고서를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 전에 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납부, 그 밖의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4. <소득세법>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장세액공제를 받은 간편장부대상자는 이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거주자가 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그 외국소득세액이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③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④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를 위하여 과세기간 중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⑤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로서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55. <소득세법> 내국법인 (주)A(벤처기업 아님)는 정관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정하고 이를 등기한 후에 2018.3.20.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주식매수선택권(부여주식 수: 30,000주, 행사가격: 10,000원, 행사시기: 2022.3.20.부터 2027.3.20.까지)을 부여하는 계약을 임원인 甲(거주자)과 체결하였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는 행사를 제한하는 어떠한 특약도 없었고, 행사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주식의 시가보다 높은 것이었으며, 미공개정보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도 없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甲이 (주)A에 재직하면서 2022.3.20.부터 2027.3.20.까지 사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② 甲이 2024.10.20. 퇴직한 후 다음 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③ 甲이 2020.6.20. 사망하고 2022.3.20.부터 2027.3.20.까지 사이에 그 상속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④ 甲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주)A 주식의 시가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금액이다.

⑤ 甲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 당해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한다.

56. <소득세법> 다음은 개인사업자인 거주자 甲이 사업에 사용하던 상가건물을 2018.7.1.에 특수관계자인 乙에게 양도한 내역이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건물과 관련된 정보

① 양도가액은 6억원, 취득가액은 4억원이며, 모두 실지거래가액이다.

② 양도 당시 건물의 감가상각누계액은 15,000,000원이며, 감가상각비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반영되었다.

③ 건물에 대한 취득세로 납부한 금액은 13,000,000원이며, 취득 시 국민주택채권을 8,000,000원에 매입하여 즉시 사채업자에게 3,000,000원에 매각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동일한 날 금융회사에 매각한다면 2,000,000원의 매각 차손이 발생한다.

④ 양도 당시 건물의 시가는 620,000,000원이고, 건물의 보유기간은 5년 2개월이며 등기되었다.

(2) 양도 시 중개수수료 9,000,000원을 부담하였고, 지출한 양도비의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였다.

(3) 보유 중 납부한 재산세 합계액은 8,000,000원이다.

(4) 당해 건물은 비사업용이 아니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시 10%, 4년 이상 5년 미만 보유 시 12%, 5년 이상 6년 미만 보유 시 15%를 적용한다.

(5)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며, 동 건물 외에 다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없다.

① 159,850,000원 ② 162,350,000원 ③ 162,850,000원
④ 188,500,000원 ⑤ 191,000,000원

57.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2018년도 중 계속 근로자임)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2018년에 지출한 의료비 내역이다. 2018년 귀속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연 급여: 35,000,000원(비과세급여 3,000,000원 포함)
(2) 본인(34세)을 위한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 800,000원
본인의 국외 치료비: 4,000,000원
(3) 배우자(32세)를 위한 치료목적 한약비: 1,000,000원
배우자를 위한 난임시술비(「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 3,000,000원
(4) 부친(67세)에 대한 질병 치료비: 700,000원
(5) 모친(장애인, 62세)을 위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600,000원
(6) 부양가족은 모두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소득은 없다.
(7) 부양가족은 다른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이 아니고, 본인 국외 치료비를 제외한 다른 의료비는 모두 국내 의료기관 등에 지출한 금액이며, 의료비 세액공제액 외 다른 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726,000원 ② 831,000원 ③ 876,000원 ④ 1,431,000원 ⑤ 1,476,000원

58. <소득세법> 다음은 제조업(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대표자 甲(거주자)의 제18기(2018.1.1.~12.31.) 사업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자료이다. 2018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손익계산서 내역
① 당기순이익은 100,000,000원이다.
② 인건비에는 대표자 甲의 급여 48,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③ 영업외손익에는 다음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 예금이자 수익: 300,000원
- 업무용화물차 처분이익: 100,000원
- 사업관련 공장의 화재로 인한 보험차익: 5,000,000원
- 현금배당수익(배당기준일의 1개월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현금 배당임): 3,000,000원
- 유가증권처분이익(채권매매차익임): 1,000,000원
(2) 대표자 甲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제품 5,000,000원은 잡비로 계상되어 있으며, 동 제품의 판매가격 및 시가는 8,000,000원이다.
(3) 甲은 복식부기의무자이다.

① 104,700,000원 ② 147,700,000원 ③ 150,700,000원
④ 151,700,000원 ⑤ 152,700,000원

59. <소득세법> 다음은 내국법인 (주)A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거주자 甲의 근로소득 관련 자료이다. 甲의 2018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근무기간: 2018.1.1.부터 2018.10.31.(퇴직일)까지 계속 근무하였음

(2) 급여내역

구 분	금 액	비 고
기본급여총액	50,000,000원	기본급으로 월 5,000,000원 지급 받음
휴가비	5,000,000원	(주)A로부터 보조받은 휴가비임
강연수당	4,000,000원	(주)A의 사내연수 강연수당임
인정상여	2,000,000원	(주)A의 2017년도 귀속 법인세무조정시 발생한 것임
식사대	1,200,000원	월 120,000원(회사는 현물식사를 별도 제공하지 않음)
자가운전보조금	3,000,000원	월 300,000원(시내출장 등이 있을 시 甲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였고, 이에 소요된 실제 여비는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장여비 규정에 의해 별도로 지급받았음)

(3) 근로소득공제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① 44,590,000원 ② 44,840,000원 ③ 48,290,000원

④ 49,340,000원 ⑤ 50,090,000원

60. <소득세법>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甲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甲의 2018년 귀속 근로소득 등 관련 자료
① 연 급여: 93,000,000원 [식사대 2,400,000원(월 200,000원×12개월) 포함, 회사는 현물식사를 별도 제공하지 않음]
②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5,000,000원
③ 법령에 의한 건강보험료 회사부담금: 2,400,000원
④ 법령으로 정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6,000,000원(국내에서 받았으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짐)
⑤ 근로소득공제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2) 甲은 상가건물을 2017년 12월 초부터 2018년 12월 말까지 매월 임대료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기로 약정하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당해 임대사업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장부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며, 2018년 필요경비는 10,000,000원이다. (임차인과는 특수관계가 아니며 임차기간 중 임차인 변동은 없고, 사업기간 중 휴업사실 없음)
(3) 甲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를 양도하고 발생한 양도소득은 10,000,000원이다.
(4) 甲은 직장동료 乙에게 2018.4.1.에 1억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연 5%)는 1년 후 받기로 하였다. (甲은 금전 대여를 사업적으로 하지 않음)

① 89,560,000원 ② 93,360,000원 ③ 99,560,000원
④ 103,360,000원 ⑤ 123,100,000원

61.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하는 상각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조업의 기계장치: 정률법
②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정액법
③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생산량비례법
④ 광업권: 생산량비례법
⑤ 개발비: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62. <법인세법>「법인세법」상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및 결정·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는 법인도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된 신고서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내국법인의 신고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경정한다.

63. <법인세법>「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것은?

①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② 증자 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③ 이월익금

④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⑤ 무액면주식의 경우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4. <법인세법>「법인세법」의 총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③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특정된 경우 그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④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그 중 하나의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⑤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이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연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65. <법인세법> 「법인세법」 상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및 직전 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그 결손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천재지변 등 재해로 상실 전 자산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자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된다.

③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당 법인의 국내 법인세 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하다.

④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법인세를 추계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모두 적용 가능하다.

⑤ 결손금의 이월공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한하여 이월하여 공제한다.

66. <법인세법> 다음은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18기 사업연도(2018.1.1.~12.31.)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이다. 제18기에 필요한 세무조정을 적정하게 하였을 경우, 이 같은 세무조정이 제18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미친 순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익금과 손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손금에 대한 법정한도금액은 초과하지 않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주)A의 제18기 결산서에 반영된 사항	비 고
배당금수익 1,000,000원(해산한 법인 (주)B의 잔여재산 분배로 인한 의제배당)	● (주)B의 해산등기일: 2018.12.31. ● (주)B의 잔여재산가액확정일: 2019.1.31.
선급비용 1,000,000원(지출 후 이연처리한 접대비)	● 접대비 지출일: 2018.12.31. ● 결산상 손비계상일: 2019.1.31.
영업외비용 1,000,000원(어음을 발행하여 지출한 기부금)	● 어음발행일: 2018.12.31. ● 어음결제일: 2019.1.31.
영업외수익 1,000,000원(유형자산 양도로 인한 처분이익)	● 매수자의 사용수익일: 2018.12.31. ● 대금청산일: 2019.1.31.

① (-)2,000,000원 ② (-)1,000,000원 ③ 0원

④ (+)1,000,000원 ⑤ (+)2,000,000원

67. <법인세법>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 상시근로자 50인)가 다음 자료를 근거로 제18기 사업연도(2018.1.1.~12.31.)의 세무조정을 적정히 하는 경우, 사내유보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할 금액의 합계는 각각 얼마인가? (단, 전기 이전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였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제18기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상의 기초잔액 및 관련 자료

과목	기초잔액(원)	제18기 중 발생한 사항
토지	△8,400,000	토지의 절반을 현금 60,000,000원에 처분하고,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00원을 결산서에 계상하였다.
건물	5,000,000	(주)A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며, (주)A의 대주주인 (주)B가 사용하고 있다. (주)A는 당해 건물의 외부도장 비용 2,000,000원을 현금지출하고, 이를 수선비로 결산서에 반영하였다.
기계장치	-	제18기 초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였고, 취득대금 3,000,000원은 3년에 걸쳐 매년 말 균등상환하며, 취득대금의 현재가치 2,500,000원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기계장치 2,500,000 현재가치할인차금 500,000 (대) 장기미지급금 3,000,000

(2) 제17기 1.1.에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 1대(「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로서의 요건은 모두 충족함)를 제18기 12.31.에 처분하고, 이에 따른 처분손실 11,500,000원을 결산서에 반영하였다.

	사내유보	사외유출		사내유보	사외유출
①	3,500,000원	7,240,000원	②	4,200,000원	5,500,000원
③	5,000,000원	4,200,000원	④	7,700,000원	2,000,000원
⑤	9,200,000원	2,000,000원			

68. <법인세법> 다음 자료에 의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에 대한 제18기 사업연도(2018.1.1.~12.31.)의 세무조정 결과 ㉠익금산입·손금불산입 합계와 ㉡손금산입·익금불산입 합계는 각각 얼마인가? (단, 전기 이전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였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건물 A(취득가액 350,000,000원, 당기말 감가상각누계액 120,000,000원)를 당기말에 「보험업법」에 따라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당기 손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차) 건물 A 20,000,000 (대) 유형자산평가이익 20,000,000

(2) 건설 중인 건물 B의 일부가 완성되어 업무에 이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당해 완성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6,000,000원이다.

(3) 전기에 취득한 건물 C(취득가액 30,000,000원, 전기말 감가상각누계액 7,000,000원, 전기말 상각부인액 4,000,000원)의 결산상 당기 감가상각비 계상액은 3,000,000원이다. 감가상각방법은 신고하지 않았고 내용연수는 10년이다.

(4) 건물 D(취득가액 5억원, 전기말 감가상각누계액 50,000,000원)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로 20,000,000원을 지출하고, 이를 손익계산서상 수선비로 회계처리하였다. 당해 건물에 대하여 제18기 결산상 계상된 감가상각비는 없으며, 감가상각방법은 신고하지 않았고 내용연수는 10년이다.

	㉠	㉡
①	0원	0원
②	0원	5,000,000원
③	6,750,000원	0원
④	6,750,000원	5,000,000원
⑤	9,250,000원	11,000,000원

69. <법인세법>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18기 사업연도(2018.1.1.~12.31.) 세무조정과 관련된 다음 자료의 각 ( )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전기 이전 및 당기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였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지급이자

제18기 결산상 지급이자는 40,000,000원이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제18기 중 차입금의 금액 변동은 없었고 차입금의 이자율은 연 5%이다. 제18기 3.15.에 (주)A의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대여하여 기말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은 (ㄱ)원이며, 지급이자에 대한 제18기 세무조정 결과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4,000,000원이다.

(2) 재고자산

상품 평가방법에 대하여 법인설립시 후입선출법으로 적법하게 신고하고 계속 적용해왔으나, 제18기 10.31.에 총평균법으로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제18기 결산시부터 기말 상품에 대하여 총평균법으로 평가하고 이를 결산서에 반영하였다. 기말 상품에 대하여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선입선출법을 적용한 평가액은 각각 250,000원, (ㄴ)원, 500,000원이며, 기말 상품에 대한 제18기 세무조정 결과 1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3) 임대료

제18기 5.1.부터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수령한 임대보증금은 123,200,000원이고 매월 (ㄷ)원의 임대료를 수취하여 결산상 수익으로 반영하였다. 당해 사택의 시가는 480,000,000원이며,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5%이다. 시가에 해당하는 당해 사택의 적정한 임대료는 확인되지 않았고, 당해 사택 임대료와 관련된 제18기 세무조정 결과 2,320,000원을 익금산입하였다.

	ㄱ	ㄴ	ㄷ
①	100,000,000	400,000	200,000
②	100,000,000	400,000	300,000
③	100,000,000	600,000	200,000
④	120,000,000	400,000	200,000
⑤	120,000,000	600,000	300,000

70. <법인세법> 다음은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18기 사업연도(2018.1.1.~12.31.)의 세무조정 및 신고·납부 관련 자료이다. 각 ( )에 들어갈 금액을 모두 합산하면 얼마인가? (단, 전기 이전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였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주)A가 2015년에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자회사 (주)B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액 10,000,000원이 제18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A는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한다. (주)A는 동 배당금과 관련하여 ( )원을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법정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당해 외국법인세액을 제18기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주)B에 대한 (주)A의 출자비율은 40%이며, (주)B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법인세액은 각각 3억원과 1억원이다.

(2) 제18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는 (주)A의 개인주주 甲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수취한 이자수익 20,000,000원과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현금배당금 1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모두 국내에서 지급받으면서 ( )원의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였다.

(3) 가산세 3,000,000원을 포함한 자진납부할 세액이 18,000,000원으로 산출되어, 분납할 수 있는 최대금액인 ( )원은 분납하기로 결정하였다.

① 8,000,000 ② 10,400,000 ③ 12,200,000 ④ 14,400,000 ⑤ 15,000,000

71.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의 총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72.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②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③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물납하는 경우

④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73.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의 계산 및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의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그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74.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를 처음 공급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환입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ㄷ.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75. <부가가치세법>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甲은 2018.1.1.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다. 전환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이 다음과 같으며 모두 매입세액공제대상일 경우 재고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단, 甲은 일반과세자 전환시 보유자산에 대한 '재고품 등 신고서'를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가정하고 자산의 취득은 적격증명서류를 갖추고 있음)

(1) 2018.1.1. 현재 보유자산 현황(취득가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취득일자	취득가액	장부가액	시 가
건물	2014.6.5.	220,000,000원	120,000,000원	230,000,000원
비품	2016.4.25.	44,000,000원	18,000,000원	24,000,000원
상품	2017.12.20.	22,000,000원	22,000,000원	26,000,000원

※ 건물과 비품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이다.
(2)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은 10%로 가정한다.

① 7,200,000원 ② 12,600,000원 ③ 14,400,000원
④ 15,600,000원 ⑤ 16,200,000원

76.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2018.10.1.에 과세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제조업) 甲의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 및 매입 내역이다. 甲이 2018.12.1.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을 때, 사업자미등록에 대한 가산세는 얼마인가? (단,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국세기본법」 상 가산세 감면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구 분	10.1.~10.31.	11.1.~11.30.	12.1.~12.31.	합 계
매 출	75,000,000원	60,000,000원	55,000,000원	190,000,000원
매 입	40,000,000원	20,000,000원	25,000,000원	85,000,000원

① 0원 ② 750,000원 ③ 1,050,000원 ④ 1,350,000원 ⑤ 1,900,000원

77.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아님)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甲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18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차감 납부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공급내역

기 간	업 종	공급대가
2018.1.1.~6.30.	음식점업	22,000,000원
2018.7.1.~12.31.	음식점업	23,000,000원
합 계		45,000,000원

(2) 공급대가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금액은 8,000,000원이다.
(3) 농산물 구입은 계산서 수취분이며 농산물 가액은 1,090,000원이다.
(4) 대형마트를 통한 조미료 등의 구입은 세금계산서 수취분이며 매입세액은 1,000,000원이다.
(5) 음식점업의 업종 부가가치율은 10%이다. 2018년 예정부과기간의 고지세액은 없으며,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6) 매입세액 및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고, 세액공제 등에 대해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가정하며, 甲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다.

① 0원 ② 52,000원 ③ 61,260원 ④ 152,000원 ⑤ 161,260원

78. <부가가치세법>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주)A(제조업)의 공급에 대한 다음 자료에서 2018년 제2기 과세기간(2018.7.1.~12.31.) 공급가액의 합계는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2019.1.31.에 인도 예정인 재화(공급가액 1,000,000원)에 대한 대가를 2018.12.20.에 모두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즉시 발급하였다.
(2) 2018.9.1.에 할부판매 조건으로 재화를 인도하고, 공급가액 1,000,000원은 10월 말부터 2개월마다 4번에 걸쳐 받기로 하였다.
(3) 2018.5.1.에 인도를 완료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그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2018.10.31.에 연체이자 1,000,000원을 수취하였다.
(4) 2018.12.1.에 상품권 1,000,000원을 현금판매하였고, 그 후 당해 상품권은 2019.1.10.에 현물과 교환되었다.

① 0원 ② 1,000,000원 ③ 2,000,000원 ④ 3,000,000원 ⑤ 4,000,000원

7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② 재판매가격방법
③ 원가가산방법
④ 매출총이익률방법
⑤ 이익분할방법

8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가 간 조세협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이 조세조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내에서 납부할 조세를 징수하기 곤란하여 체약상대국에서 징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체약상대국에 대하여 조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체약상대국에 납부할 조세를 우리나라에서 징수해 주도록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 불복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세정보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획득하여 체약상대국과 교환할 수 있다.

⑤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에 세무공무원을 파견하여 직접 세무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